

“개헌 찬성” 77%... 연내 가능성은 “희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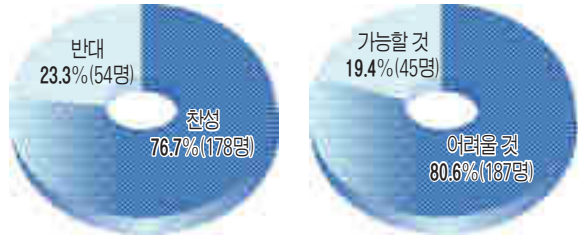
광주일보 인터넷 패널 긴급 여론조사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해 광주·전남 여론주도층 5명 중 4명꼴로 찬성 입장을 보여 개헌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헌의 시기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며,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에 개헌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전망은 80%에 달했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광주일보가 노 대통령의 대국민 특별담화 발표 직후인 이날 오후 본보 인터넷 패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e-메일 설문조사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에는 232명의 패널이 응답했다.

■ 4년제 연임제 개헌 찬반 ■ 헌정부 임기내 개헌 실현 가능성



조사 결과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76.7%로 '반대한다' 23.3%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이는 지난해 실시된 각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에 비해 찬성 비율이 훨씬 높아진 것이다. 지난해 5월 SBS 조사에서는 52.5%, 6월 한겨레 56.

6%, 12월 국민일보에는 67.7% 등으로 찬성 비율이 50~60%대였다.

하지만 현 정부 임기내 개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압도적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 개헌이 이뤄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은 80.6%, '가능할 것'은 19.4%였다. 적절한 개헌 시기는 '현 정부 임기 내'가 47.0%, '차기 정부'는 52.6%로 비교적 광범했으나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정후식기자 who@

▲ 인터넷 패널 = 광주일보사가 독자와 함께 하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 한국 신문사상 최초로 구성한 전문가 그룹. 광주·전남지역 학계, 법조, 정치, 경제, 여성 문화예술, 시민단체 등 각계 오피니언 리더층 497명이 참여하고 있다.



귀한 선물은 대바구니에 담양군 담양읍 삼다리 2구 김진중씨 부부가 설 대목을 앞두고 한과나 떡 포장에 사용될 대바구니 등 축제품 생산에 여념이 없다. /최현배기자 choi@

盧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헌하자”

올 상반기중 국민투표 추진

대선·총선 일치... 與 “환영” 한나라 “반대”

노무현 대통령이 9일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전격 제안해 정국에 파란이 일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개헌 제안에 이어 여론 수렴을 거친 뒤 오는 2, 3월께 개헌안을 발의하고 이르면 4, 5월께, 늦어도 올 상반기 안에 국민투표를 거쳐 개헌안을 확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면)

그러나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정치적 술수'로 규정하고

분명한 거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적극 환영을, 민주당과 민노당도 유보적 찬성 입장을 보였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임기 4년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한다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현행 5년의 대통령제 아래서는 임기 4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유발, 국정의 안

정성을 약화시킨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차기 국회의원은 2012년 5월에 임기가 만료되고, 차기 대통령은 2013년 2월에 임기가 만료되므로 단일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깝게 줄이지 않으면 개헌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며 개헌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권과 각계의 여론 수렴을 위해 10일 5부 요인 등 헌법기관장, 11일께 여야 각 정당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하는 등 각계 지도자들과 연례 회동을 갖고 개헌과 관련한 대화를 나눌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헌은) 적어도 상반기 안에, 4, 5월 이전쯤까지 끝나면 부담이 없다”면서 “개헌에 이르는 과정이 국민의 찬반을 물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선과정에 어떤 영향을 줄만한 성질의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니다”고 밝혀 정치적 의도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올해 정치일정도 있지

만 어떤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고 본다”면서 “87년 당시에는 10월27일에 개헌안이 확정됐고, 그해 12월 대선을 치르는 과정도 있었고, 대개 (개헌안 발의부터 확정까지)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개헌 추진과정에서 노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 임기에는 변함이 없다”며 임기 중 하야 가능성을 일축하고, 탈당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열어 “개헌론은 경제·안보 위기 등 총체적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지지를 회복을 위한 정국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꼼수”라며 “한나라당은 개헌에 관한 논의에 일절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제안을 설 명하기 위해 강재섭 대표를 방문하겠다는 이병완 비서실장의 요청도 거절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전연 분리’ 공식 발표

이사회 결정 주목

광주시와 전남도가 분리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9일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하 광전연)의 시·도 분리 운영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광전연 분리 추진에 따라 지난 1991년부터 광전연을 통합 운영해 온 시·도의 상생정신이 훼손되고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또 분리 운영 방침이 시·도지사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됐기 때문에 지역상공인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의 예산 결정 과정이나 광전연 내부 반발 등 진통은 계속될 것

으로 보인다.

유창종 전남도 기획관리실장은 이날 오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광전연을 해산하고 시·도별로 전문화된 개별 연구원을 설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도간 행정 방향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통합운영으로 ▲연구원의 비전문성을 초래했고 ▲책임 소재 및 소속감이 불명확해 효율성이 떨어졌으며 ▲시·도간 정책지원체제 이원화로 연구원의 조직이 취약했다는 문제점을 제시하며, 지난 5일 시·도지사 광전연 분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후원대학 장학57년 역사와 전통
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 062-970-0114 ~ 0119 / 062-970-0001-9
새로운 담사기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ac.kr
☎ 061-380-5051 ~ 5057 / 061-380-5000

BE > THINK > INNOVATE

GRUNDFOS

“It works like magic”

차세대 부스터 펌프 시스템, 그룬포스 Hydro MPC

인터넷만 있으면 원격에서 실시간으로 일대일 인터페이스를 가능하게 하는 세계최초의 원격지 제어 부스터 시스템, 그룬포스 Hydro MPC!

그룬포스 Hydro MPC를 설치하는 그 순간, 언제 어디서나 당신은 한국어로 부스터 시스템을 과감처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한국그룬포스펌프(주) www.grundfos.co.kr

Hydro MPC
마술같은 인터넷 부스터 펌프